

정부, 퇴직연금 개편·미래산업 육성… 양극화 완화 총력

경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3대 핵심 사회정책 구체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 체계 구축
퇴직급여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

정부가 사회 각 분야 양극화 완화에 정책적 역량을 끌어모으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관련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회의를 주재했다.

이 부총리는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 중이다.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7대 시드(SEED·7개 분야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이 논의됐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의 경우,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편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수탁자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여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7대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범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7대 시드별 2030년·2035년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한 신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른 추석에 유통업체 9월 매출 4.5% 증가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프라인 5.1%, 온라인 4.0% ↑

지난달 이른 추석 연휴에 따른 명절 특수 덕분에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4.5% 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각각 5.1%, 4.0% 증가하며 동반 상승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전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9월 24일~27일)로 인해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식품군(6.3%)과 장보기 서비스 등 서비스/기타(7.3%) 분야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다.

오프라인 부문은 백화점(8.4%), 준대규모점포(SSM·5.0%), 대형마트(4.0%), 편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의점(2.9%) 등 조사 대상 모든 업체에서 매출이 늘었다. 대형마트는 추석 먹거리와 차례 음식, 명절 선물용 가전·완구류, 의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매출이 증가했고, 지난 6개월간 이어지던 구매건수 감소세도 소폭 반등(0.5%)했다. 백화점은 식품(13.0%) 외에도 가을 의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며 여성캐주얼(15.2%)과 남성캐주얼(8.7%)가 성장을 이끌

었다. 편의점은 연휴 기간 간편식을 찾는 1인 가구 증가로 가공식품(5.9%)이 늘었으며, SSM은 농수축산물(10.0%) 위주의 제수용품 수요가 집중됐다.

온라인 유통 역시 명절 특수에 따른 식품(6.7%) 매출 증가세와 함께, 음식배달·여행·문화상품 및 e-쿠폰 등을 포함한 서비스/기타(10.6%) 이용 수요가 늘며 전체 성장을 뒷받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정관, 구미 찾아 25조 투자기업 간담회

(산업부 장관)

현장 점검하고 지원 방안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북 구미를 찾아 첨단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경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약 25조 원 규모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들과 간담회에서 지역 투자 활성화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LG이노텍 구미 4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배터리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식, 구미지역 투자기업 간담회, 제3차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지역 확산 컨퍼런스 등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LG이노텍 구미 4공장에서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용 프로세서 등에 사용되는 FC-BGA 반도체 기반 생산라인을 살피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북 구미시 소재 LG이노텍 구미 4공장을 방문했다. /산업부

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된 배터리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총 272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해 배터리 리스·구독·재사용 등 새로운 사업모델 실증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올해 첫 4곳 지정, 내년 2곳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해, 지역 맞춤형 물관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된 첫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총 4곳이 지정돼 현재 세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2027년에도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의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2035년 자율운항선박 1위 목표

AI 해양수산 전략 발표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보유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은 기존 3.7% 수준에서 2030년 10%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형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AX(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 분야 산업을 비롯해 안전·환경관리 등 해양수산 현상 전반으로 AI 활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운·해사, 항만·물류, 수산, 해양 분야 AI 혁신과 AX 생태계 조성 5대 전략과 15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해수부는 2035년까지 완전 자율운항선박 시장 1위 수주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산업통상부와 함께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사 안전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상 공급망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로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북극항로의 실측자료를 분석해 선사와 화주의 운항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항만 생산성은 2035년까지 30% 높이고 물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데 피지컬 AI를 활용한다. 2029년까지 광양항에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컨테이너 하역·이송 자동화 장비 기술 등 피지컬 AI 항만 신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AI가 작업 상황을 분석하고 하역·이송 장비 간 조정을 통해 운영을 최적화하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관리 플랫폼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부산항 통합 정보 플랫폼인 ‘Port-i’를 고도화해 해상·항만·내륙의 물류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종훈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혁신 추진”

제4대 축산환경관리원장 취임

축산환경관리원은 기관의 제4대 원장에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농식품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농정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지방 행정을 이끈 경험도 지닌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세종 본원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이자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던 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했다. 이어 기관이 축산 현장의



갈등 접점에서 실질적 해답을 주는 든든한 중재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 현장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혁신’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경영 원칙으로는 ▲상생경영(농가·주민·지자체 협력 생태계 조성) ▲신뢰경영(공정·투명한 운영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안전경영(임직원 근무 안전 및 현장 무재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